

한국의 기업윤리문제

－ 역사적 배경과 현황－

中 川 圭 輔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business ethics in South Korea. In the 1970s, the South Korean economy experienced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commonly referred to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Studies of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the later half of this period, and it was also during this time that researchers began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se problems.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this debate and these discussions increased in intensity thereafter.

Many corporate scandals have arisen from the cozy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ians, bureaucrats and the business sector, and owners of Chaebol have even been arrest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s into these scandals.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have begun to tackle business ethics problems. An increase in foreign stockholders and a rise in civic organization is also playing a critical role in the monitoring of business ethics problems in Korea.

<keyword>

South Korea, the Asian Financial Crisis, business eth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aebol,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윤리문제에 대한 시각－외환위기의 발생전까지
3. 재벌과 기업윤리문제
4.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 4-1 외국인투자의 증가
 - 4-2 시민단체의 대두
5. 한국의 기업윤리문제의 현황
 - 5-1 정부
 - 5-2 재계
 - 5-3 대학
 - 5-4 기업
6.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및 IMF 관리체제를 겪은 후 놀랄 만한 속도로 경제회복을 이루어졌다.

현재, 치열한 글로벌 경쟁하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존재 (presence) 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실질 GDP 비율은 2005년의 4.2%에서 2007년에는 5.0%까지 플러스성장을 보이고, 명목 GDP의 총액은 2005년에는 810조 5,159억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901조 1,886억원까지 상승하고 있다. 또 일인당 GDP의 총액도 16,443달러에서 19,750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7년의 수출입의 총액을 비교하면, 수입액이 2,612억 3,800만 달러에서 3,568억 4,600만달러로,

수출액은 2,844억 1,900만 달러에서 3,714억 8,900만 달러로 각각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알 수 있다¹.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경쟁랭킹(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s)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한국은 세계 131개국중, 제 11위에 위치하고 있어, 전년도의 제 23위에서 12단계가 올라가 있다.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하면, 싱가포르(7위), 일본(8위)에 이어 세번째에 위치하고 있다².

이처럼 한국경제의 호조는 숫자상만의 현상은 아니다. 주지대로 2007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는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 이명박후보자가 당선하였다. 그리고, 그는 2008년 2월 25일,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향후 5년간의 국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전정권까지의 외교정책을 전환시켜, 대미·대일 중시의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2007년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른바 한미 FTA를 체결하고 한미간의 경제무역과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또 일본과는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지만, 한일 EPA의 협의재개를 목표로 한일양국간의 교섭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³.

이와 같이 한국경제가 활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른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예에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1960년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불리는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였지만, 그 한편으로 공민권운동, 베트남 반전운동 등 사회운동이 일어나 왔다. 게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경영학회에 SIM(Social Issues in Management) 부회가 설치되고, 미국기업윤리학회가 설립되면서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한 후, 1964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맹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인식되기 시작되어, 학술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미국이나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룬 약 10년 후에 이러한 논의가 대두해 온 경위가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OECD 가맹은 1996년이며, 한국에서 기업윤리학회(현재 윤리경영학회)가 설립된 것은 1998년이다. 이 시기부터 약 10년 경과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에서는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논의되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개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관심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그 다음에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재벌에 초점을 맞추어 재벌문제와 기업윤리문제의 관련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투자의 증가 및 시민단체의 대두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위환위기 및 IMF 관리체제를 극복한 현재의 한국에서 기업윤리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지, 정부, 재계, 학술계, 기업,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윤리문제에 대한 시각-외환위기의 발생전까지

한국은 NIES(신흥공업경제지역)의 일각으로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우등생이다.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재벌이었지만, 그 재벌을 뒤에서 통제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제하에 두어, 정부가 발령하는 경제정책에 재벌이 스스로 영합해 나갈밖에 없는 구도가 완성되었다.

이 때문에, 재벌이 사업활동을 실시할 때, 정부와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만약, 경시한다면 재벌의 붕괴는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은 경제활동보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점차 양자의 유착관계가 깊어져 갔다. 그리고, 이 유착관계가 수많은

비리발생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해방 후,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수립하였지만,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많은 이권획득 경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49 년에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을 들 수 있다.이 법률에 근거해 정부관리하에 있던 구일본인공장이 점차 한국기업가로 불하할 수 있었다.또 1953 년의 한국전쟁의 휴전후, 미국에 의한 대한물자원조나 UNKRA (유엔한국재건단), ICA (국제기조국)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원조를 둘러싼 이권획득 경쟁이 있다.귀속재산을 획득하여 자금원조의 이권획득에 승리한 기업만이, 후에 재벌로 불리는 거대한 기업그룹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어쨌든, 귀속재산이나 원조물자의 입수과정에서 과도한 정정유착을 도모해 이 유착관계가 비리발생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1960 년대부터는 박정희 정권이 개발독재의 이름아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 정부주도의 경제건설을 행하였다.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영합하는 재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더욱 정부와 재벌 사이의 유착관계는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재벌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부정자금을 제공하게되고, 이것이 기업의 윤리적문제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70 년대후반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이 성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례를 들면 황명수 (1977) 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재벌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한편, 기업가의 윤리의식 내지 기업가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972 년에 실시한 조사를 기초로 한 고찰이지만, 한국경제가 양적으로 확대를 계속하는 중, 기업윤리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⁴.

80 년대에 들어, 너무 커진 재벌에대해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80 년에는 한국판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고, 86 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제정해 재벌의 경제력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재벌의 정부에 대한 발언력이나 한국사회에 차지하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바꾸어 말하면 재벌이 한국정부를 흔들 정도의 지위를 확립해 온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후, 1987 년에 민주화가 실현되어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기운이 한층 고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선언 이후, 지금까지 억제되어 온 노동쟁의가 연발해 노동자가 저임금의 개선을 요구하였다.또, 85 년의 프라자 합의 (Plaza Accord) 이후, 원고가 일어나, 지금까지 저가격 노선을 취해 온 한국 제품도 점차 그 국제경쟁력이 약체화되어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중에,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논문이나 교육체계가 준비되었다.

예를 들면 황보태 (1981) 는 한국기업의 기업윤리의 실태와 문제점에 논의하고 있다. 황보태 (1981) 는 한국경제가 국가주도로 발전해 온 것을 바탕으로 그 중에 기업과 국가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가 부정행위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⁵.또 주목 하여야 할 것은 현대재벌 (당시) 의 창업자인 정주영 (1981) 이 기업윤리의 확립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이다. 당시 그는 재계대표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FKI) 의 회장을 역임한 후,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한 인물이다.

게다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대표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경제기술조사센터편 (1981) 을 발간하고 한국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산업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문제시되고 있는 현상을 호소하고 재계를 대표해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한국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논의할 때 정부의 책임문제도 동시에 논의하여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적인 성장확대를 위해서 무분별한 지원을 할 뿐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전의 기업평가나 사후의 통제 등, 제도상의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당시의 정부의 대응에 난색을 나타냈다⁶.

또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교에서 「기업과 사회」나 「기업윤리」라는 과목이 개강되게 되었다.그리고 학술관계자들이 외국의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일반시민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90 년대에 들어 한국에서는 약 30 년만의 문민정권인 김영삼정권이 수립하였다. 김영삼정권은 정계에의

부정자금이나 비밀정치자금으로 의혹이 있던 재벌에 대해 사법처리등의 법적수단을 이용해 군사정권까지의 정부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배제나 금융빅뱅 (Big Bang) 등의 규제완화를 전개해 국제경쟁력이 약체화하고 있던 한국경제를 글로벌화 시키려고 하였다. 이른바 세계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논의도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1991년 10월에 한국경영학회가 특별발표회의의 테마를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이라고 규정해 기업윤리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것을 서적으로 한 것이 한국경영학회편 (1992)이다.

이후 강명현 (1993), 서광조·이응권 (1996), 공병호·최승노 (1996)가 출판되는 한편 조홍석 (1991), 박인순 (1992), 이정제 (1996) 등 석사논문도 활발하게 쓰여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향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고조를 보이기 시작한 그 때, 위환위기가 발생하여 한국경제는 마침내 채무불이행 (Default)에 떨어질 직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어등 중견 재벌들이 파산하는 사태로 이르게 되었다.

파산의 원인은 부정회계나 분식회계등의 문제, 과도한 문어발식 경영을 바탕으로 한 재무체질의 취약함,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재벌오너나 회장비서실의 존재, 기업지배구조의 결여등 비난의 화살은 재벌문제로 인식되어 재벌의 윤리적문제가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재벌과 기업윤리문제의 관련을 고찰하면서 기업윤리문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재벌과 기업윤리문제

전술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박정희정권하의 개발독재 그리고 7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화를 목적으로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완수해 갔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견인차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재벌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재벌이 정부권력을 위협할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게되자, 정부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국형 독점금지법을 제정해 재벌의 시장집중문제를 완화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재벌은 다각화 노선을 계속해, 한 시장의 독점 뿐만이 아니라, 경제전체를 재벌이 지배한다고 하는 염려가 학술계를 중심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⁷.

이러한 지적을 받아 정부는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더욱 규제하려고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순수지주회사의 설치를 금지해, 재벌의 규모확대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설정해, 지정을 받은 재벌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나 출자총액의 제한, 그리고 계열기업간의 상호소유주식 금지등의 규제를 마련하였다⁸.

그 이후 재벌문제의 관심은 재벌의 지배구조문제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에 옮겨 가게 된다. 이 이유는 1997년의 외환위기 및 IMF 관리체제를 통해서 98년에 발족한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을 들 수 있다. 재벌개혁때,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의론이 일어나 재벌의 경제력집중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고찰되었다. 그것은 원래 재벌이 이렇게까지 확대한 핵심적인 원인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 그리고 불투명한 경영체질에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재벌의 오너체제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오너체제를 어떻게 감시하고, 규율을 줄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들면 외환위기직후는 강철규 (1999), 김대환·김균 편 (1999)을 들 수 있다. 특히 강철규는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며, 재벌해체론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2000년에 들어서는 황인학 외 (2000), 매일경제산업부 외 (2000), 김기원 (2002), 장세진 (2003), 최정표 (2004), 송원근 외 (2005) 등 연속적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재벌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모색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 오랫동안 의논되어 온 재벌문제는 경제력집중문제 부터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이행 해 온 경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은 한국의 기업윤리문제가, 이러한 문제 이상으로 뿌리 깊고,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조동성 (1997) 은 1989 년부터 1996 년까지 동아일보의 사설에 게시된 재벌관련의 기사를 조사해 다루어진 토픽 (Topic) 의 빈도를 정리하였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재벌의 과도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의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아래와 같은 표에서 보는 경제력집중 문제의 기사는 1980 년 이후부터는 증가경향에 있지만, 한국경제가 비약을 이루기 이전의 1950 년부터 1970 년까지는 불과 1 건이며, 전체비율의 1% 미만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1950년부터 1970년, 그리고 1980년부터 1996년의 총계 36년의 조사결과를 합산 해 보았다. 그랬더니 경제력집중 23, 공정거래문제 17, 근로자문제 8, 기업윤리 30, 환경오염 8, 소비자문제 3 이라는 결과였으며, 기업윤리를 문제시한 기사가 가장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전부터 가장 문제시된 재벌문제는 실은 기업윤리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뿌리깊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 정경유착에 의한 독점적 자본축적의 문제점의 총계는 정부의 특혜적지원 32, 금융의 불공정성 21, 부동산투기 14, 정치자금의 지원 5 라는 결과였다. 정경유착의 원흉은 정부이 었고 ,정부로부터의 재벌에대한 특혜적 지원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혜를 재벌이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파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재계관계와 기업윤리문제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 주된 재벌문제 (단위 : 건)

분류	내용	1950 년	1980 년	1989 년
		~70 년	~88 년	~96 년
대규모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경제력집중	1	8	14
	공정거래문제	8	7	2
	근로자문제	2	6	-
	기업윤리	14	5	11
	환경오염	2	4	2
	소비자문제	1	2	-
	계	28	32	29
정경유착에 의한 독점적 자본축적 문제	정부의 특혜적 지원	20	7	5
	금융의 불공정성	10	7	4
	부동산 투기	2	6	6
	정치자금 지원	1	1	3
	계	33	21	17
기업경영 및 소유의 문제	경영부실화	9	20	10
	소유집중	4	1	6
	계	13	21	16
총계		74	74	62

(자료) 조동성 (1997), pp.230-237 각각 표의 수치를 필자가 통합.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윤리문제가 발생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한국기업에 있어서의 비윤리적 행동의 발생유형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비윤리적행위가 발생하는 부문은 경쟁자와의 관계로부터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내부비리, 고객, 정부, 환경,종업원이라는 순이었다.

기업내부에서 어떤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래처관계의 57%가 가장 많고, 이어서

금전관계가 23%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경쟁자와의 관계는 입찰담합이 31%로 가장 높고,덤핑,기업비밀획득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허위과대 광고가 53%, 유해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23%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뇌물 제공이 44%, 탈세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산업공해 배출이 59%, 또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공해물질 배출이 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한국기업의 외부 환경에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결과가 되었다.

표 2 한국기업의 비윤리적행동의 발생유형 (단위 : %)

발생부문	발생유형
비윤리적행위가 발생하는 부문	경쟁자 (35%) · 기업내부비리 (28%) · 고객 (15%) · 정부 (15%) · 환경 (5%) · 종업원 (2%)
기업내부에서 비윤리적행위가 발생하는 부문	리베이트 수수 등 거래처관계 (57%) · 경리, 회계등의 금전관계 (23%) · 기업 비밀 누출등의 보안관계 (10%) · 기타 (10%)
대 경쟁자 관계	입찰담합 (31%) · 덤핑 (21%) · 기업비밀획득 (9%) · 지적재산권침해 (8%) · 거래처차별 (7%) · 부당한 스카우트 (4%) · 기타 (8%)
대 고객 관계	허위 과대 광고 (53%) · 유해 상품의 생산 · 판매 (23%) · 허위의 용량 및 성분 표시 (7%) · 폭리 취득 · 가짜상표 부착 (4%) · 기타 (12%)
대 종업원 관계	인격 침해 (36%) · 근로조건 무시 (29%) · 고용차별 (20%) · 안전성 무시 (5%) · 기타 (10%)
대 정부 관계	뇌물 제공 (44%) · 탈세 (22%) · 정치자금제공 (10%) · 허위 보고 (7%) · 보고 의무 위반 (6%) · 기타 (11%)
대 지역사회	산업공해 배출 (59%) · 폐기물 불법 처리 (26%) · 부당한 공장 폐쇄 (1%) · 기타 (14%)
대 외국정부 · 기업 관계	덤핑 판매 (26%) · 뇌물 제공 (18%) · 세금 회피 (17%) · 부정돈세탁 (9%) · 공해 물질 수출 (4%) · 기타 (19%)
대 환경 관계	공해 물질 배출 (46%) · 환경기준 위반 (26%) · 자연 파괴 (13%) · 산업 폐기물 수출입 (3%) · 기타 (12%)

(자료) 조은상 (2003) 을 참고로 필자작성.

이상이 한국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이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왔는지를 보기로 하겠다. 1990 년대 사회문제로서 크게 클로즈 업 (close up) 된 문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91 년 3 월 두산전자가 유해물질 폐놀을 유출해 수도를 오염한 사건에서 시작해, 이어서 92 년 7 월에는 서울시 신행주대교가 폭락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93 년 1 월에는 청주시에 있는 빌딩의 가스봄베가 폭발해 빌딩이 붕괴하였다.그리고 94 년 10 월 서울시에 있는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또 94 년 4 월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가스가 폭발한 사건, 95 년 6 월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서울시에 있는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약 1,500 명에 이르는 대참사가 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90 년대는 한국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사건이 연발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2000 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시민의 소비생활과 관계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예를 들면 01 년 7 월의 공장배수로 얼음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한 오수음료수 사건, 04 년 6 월의 폐기처분 해야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06 년 5 월의 수출용 김치안에 기생충이 발견된 김치기생충 혼입 김치 판매 사건, 그리고 2007 년에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식품위장표시문제가 발생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매점 1082 점포가 적발되는 사태가 있었다⁹.

이와 같이 한국사회를 흔드는 사회문제나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한국의 기업비리중에서도 필자가 특히 주시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정재계의 불공정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기업비리, 한층 더 언급하면, 부정행위로 인해서 재벌오너가 체포된 사실이다. (표 3를 참조)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한국이 정부-재벌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유착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에 유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조동성 (1997) 에서도 본 것처럼, 정부로부터의 특혜적인 지원이 기업비리를 낳는 온상이 되고 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있어서, 정부-재벌 양자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다수의 비리가 발생해 온 사실중, 주된 예를 이하에 열거해 보았다. 각각의 사건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지만, 1990 년이후 수많은 기업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기, 탈세, 뇌물 등 대정부 관계에 의한 사건이 다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재벌에 의한 걸치레, 횡령, 비밀자금, 주가조작, 주식거래의 배임등의 부정행위등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준다.

표 3 90 년이후 재벌오너가 체포된 사건의 예

92년 4월	현대 상선·탈세 사건으로 정몽헌부회장 체포
93년 6월	한양그룹·임금 미불 사건으로 배종열 회장 체포
93년 12월	한화그룹·의환법 위반 사건으로 김승연 회장 체포
94년 8월	대우그룹 사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공사의 안병화 사장 체포
95년 11월	한보그룹·비밀 자금 사건으로 정태수 회장 체포
97년 2월	한보그룹 사건으로 관련하는 은행의 총재 체포
99년 2월	신동아그룹·부정 용자로 최순영 회장 체포
99년 9월	현대 증권·주가조작 용의로 이익태 회장 체포
99년 11월	한진그룹·횡령과 탈세로 조양호 회장 체포
03년 2월	주식 거래의 배임 용의로 SK 그룹·최태원 회장 체포
05년 6월	대우그룹·걸치레·횡령등으로 김우중 전회장 체포
06년 4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로 체포
07년 5월	한화그룹·김승연 회장을 폭행이나 감금 용의로 체포

(자료) 각종 보도를 기초로 필자작성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재벌 오너 스스로가 부정을 범해, 체포된 사태들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기업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사그러드는 분위기가 없지만, 도대체 왜 이러한 비리가 계속되어 왔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필자는 재벌문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있고 원인은 이하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권이 가지는 권력의 거대함을 들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은 주로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재벌은 정부의 의사대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정권 및 대통령에 거대한 권한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 구도는, 정부가 직접 은행을 지배하는 「관치금융」이라고 불리는 수법에도 나타나고 있다. 재벌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정계와의 관계를 깊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 특히 정부 관계자와 재벌 오너 사이에서 비리발생의 온상이 되는 거래가 계속되어 왔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둘째 재벌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지나친 무관련다각화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로 여겨져 온 것이, 재벌의 높은 부채비율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전후를 추이하는 것이 건전하다라고 알려지지만, 한국 재벌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하의 표는 1985 년 당시의 재벌의 재무구조를 나타낸 것이지만, 15 개의 재벌이 모두 200%를 넘고 있고 심지어는 800%나 1000% 등 천문학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재벌마저 존재한다. 이것은 재벌이 큰 것은 좋은

일이다 (too big to fail) 라는 신념의 아래 확대노선을 계속 달려 온 결과이며, 확대노선의 명목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무관련다각화였다. 또 확대노선을 달린 결과, 재벌그룹내의 계열기업도 증가해 갔다. 1997 년의 5 대재벌의 계열회사의 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업종의 계열기업이 재벌 그룹기업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무구조상의 문제와 과도한 무관련다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은 당연히 건전한 경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재벌의 경영은 항상 적자 조업이었다고 판단된다. 그것들이 비리발생의 원천이 되어온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열기업과의 부정한 내부거래나 이익의 증가나 자산숨기기, 또 재무제표의 개찬등 모든 수단을 다해, 재벌은 건전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배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재벌의 지배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오너에 의한 재벌지배의 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부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회장비서실의 존재, 위법상속에 의한 지배권 계승의 문제, 그리고 적은 내부보유율로 재벌전체를 지배하는 주식소유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또, 오너체제에 의해 기업지배구조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오너에대한 모니터링 (monitoring) 이 빠져 있던 것도 문제의 일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 주요재벌의 재무구조 (1985 년 기준)

단위 : 100 만원

기업명	대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	계열 기업수
1 현대	6,879,212	5,732,184	4,338,124	750,238	142,997	331.2	42
2 삼성	5,489,526	4,120,988	3,503,912	321,449	56,204	567.8	45
3 럭키 금성	5,447,660	3,342,246	2,751,830	348,894	26,608	466.1	52
4 선경 (현 SK)	4,820,051	1,890,202	1,592,739	177,811	24,867	535.4	26
5 대우	4,661,436	4,115,725	3,314,767	492,186	74,539	413.9	46
6 쌍용	2,532,819	2,284,484	1,868,785	140,459	13,044	449.6	19
7 국제 상사	1,895,363	1,445,088	1,285,908	88,560	6,286	808.2	31
8 한국 화약	1,689,377	1,342,344	1,026,207	118,864	27,853	324.6	21
9 한진	1,598,753	1,663,616	1,384,583	107,252	32,838	496.2	14
10 효성	1,573,443	1,304,470	1,159,157	137,914	101	797.7	30
11 대림산업	1,374,113	1,183,579	897,239	154,145	22,934	313.4	12
12 두산	1,066,267	691,893	564,367	61,538	16,472	442.6	21
13 롯데	1,018,580	897,412	686,141	176,812	33,046	324.8	24
14 코오롱	752,425	553,868	464,868	52,868	5,293	552.3	20
15 신동아	749,566	670,006	619,985	58,299	-2,956	1,239.3	25

주 : 계열기업수는 「주요 재벌그룹 계열기업 실태조사」 (1984 년) 의 수치를 사용.

(자료) 朴一 (2002), p119

표 5 5대재벌의 내부보유율의 추이 (단위: %)

	현대	삼성	LG	대우	SK
97년도 동일인+특수 관계인	13.8	3.5	5.4	6.1	14.1
97년도 내부지분	56.2	46.7	40.1	38.3	44.7
98년도 동일인+특수 관계인	11.2	2.9	5.3	7.2	9.7
98년도 내부지분	53.7	44.6	41.9	41.0	58.4
99년도 동일인+특수 관계인	5.4	2.0	3.7	5.6	6.3
99년도 내부지분	56.4	42.5	52.4	54.1	66.8

주: 내부지분 비율은, 그룹기업 및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총주수에 대한 비율.

또, 특수관계인은 친족, 비영리 법인, 종업원등이며, 동일인은 오너경영자이다.

(자료) 山根 (2002), p18

4.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4-1 외국인투자의 증가

1998년의 취임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외자유치가 한국경제의 부활의 열쇠라고 말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종래까지 무관런다각화등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한 재벌 경영을 견제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외국인투자에 의한 조정을 도모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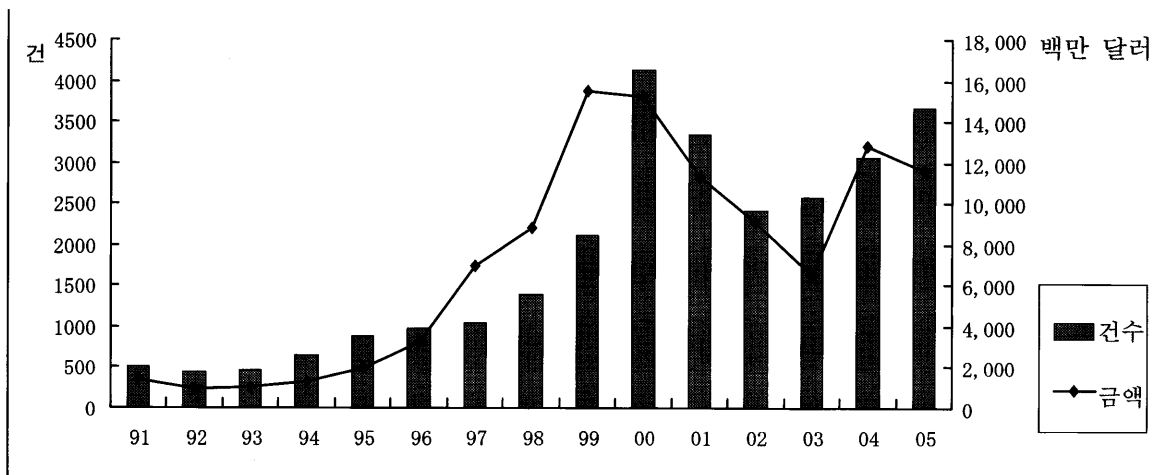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가 ①장기자본의 도입, ②고용의 창출, ③첨단기술과 선진형 경영의 노하우의 도입, ④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 ⑤수출의 확대라고 하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一石五鳥)」의 효과가 초래된다고 기대되었다¹⁰⁾.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규제가 큰폭으로 완화되게 되었다.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기로 하자. 신고 base 로 본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은 1991년부터 96년까지는 그 건수가 3 자리수에 그치고 있었지만, 97년에는 1,000건을 넘어 99년에는 2,000건을 돌파하였다. 다음 해에는 4,000건을 넘어, 그 후, 약 2,000부터 3,000건의 값으로 추이하고 있다.

한편, 금액으로는, 90년대 전반은,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99년에는 150억 달러로 증가해, 그 후 증감은 있었지만 안정이 계속되어 외국인 투자액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 (신고 base)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한국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매년도판을 참고로 필자작성.

이하의 표는 유형별로 본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에의 투자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M&A 는 98 년에는 구주식의 건수가 238 건으로 금액이 1,245 백만 달러, 인수·합병의 건수가 25 건으로 금액 3,832 백만 달러이며, 합계로 5,077 백만 달러, 57.4%이었다. 그 후, 종식하기 시작해 그 비중도 18%부터 23%대에까지 침체되었다. 그러나, 2003 년에는 45.5%라고 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는 공장 설립, 사무소 설립의 합계의 비율이 98 년에 42.6%, 99 년에는 67%, 2000 년에는 81.2%라고 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2003 년 이후는 50%대를 추이하고 있다.그렇지만, M&A, 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의 투자실적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간파할 수 있다.한편,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동안, 한국기업의 자금조달도 종래의 간접 금융에 의한 조달로부터 직접금융에 의한 조달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유형별의 투자 실적 (신고 base)

(단위 : 건, 백만 달러,%)

년	M&A						그린필드 투자					
	구주식		인수·합병		금액 합계	비중	공장설립		사무소 설립		금액 합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238	1,245	25	3,832	5,077	57.4	194	359	944	3,316	3,675	42.6
1999	241	2,333	27	2,792	5,125	33	259	3,824	1,576	6,582	10,406	67
2000	313	1,269	13	2,857	4,126	18.8	309	1,666	3,507	10,690	12,356	81.2
2001	290	1,901	8	748	2,649	23.5	286	945	2,760	7,692	8,637	76.5
2002	260	714	25	1,370	2,084	22.9	275	840	1,849	6,168	7,009	77.1
2003	278	1,759	8	1,184	2,943	45.5	187	551	2,091	2,975	3,527	54.5
2004	321	4,636	19	1,533	6,169	48.2	252	2,928	2,481	3,689	6,617	51.8
2005	361	4,966	10	302	5,268	45.6	234	1,390	3,062	4,904	6,294	54.4

주 : 인수·합병=인수·합병 목적의 신주+인수·합병 목적의 장기 차관.

(자료) 遠藤 (2007), p90

이와 같이, 국내에 있어서의 M&A 시장의 확대, 또 한국기업의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이 진행되는 중, 외국인투자의 세력은 한층 더 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의 시중은행에 대해서 보면 시중은행 16 행 가운데, 주택은행 (64%), 국민은행 (53%), 제일은행 (51%), 신한은행 (50%), 한미은행 (35%), 외환은행 (26%), 하나은행 (23%) 이 차지하는 외자비율이 전체의 20%를 넘고 있다.

특히, 97 년의 외환위기에 의해 경영과탄한 제일은행은, 국유화 된 후, 공적자금 17 조 7000 억원이 투입되었다.그 후, 미국계의 투자 펀드인 뉴 브릿지·캐피탈 (New Bridge Capital) 이 99 년에 제일은행의 주식 49%를 약 5000 억원으로 매입하고 있다¹¹.

4-2 시민단체의 대두

이어서, 한국의 시민단체의 대두를 들 수 있다. 근년, 한국사회는, 「시민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¹².

시민단체의 활동 내용도, 정치활동 이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로서는, 환경문제, 경제적공정, 인권문제, 여성문제, 교육개혁, 소비자 주권 등에 관한 활동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 년 1 월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시대를 반영하는 사건이 있었다.그것은 동년 4 월 16 일의 제 16 대 총선거에 대해서 행해진 「락천·낙선운동 (落薦·落選運動)」이다¹³.이 운동을 전개한 주체는, 동년 1 월에 412 개의 NGO 에 의해 결성된 총선시민연대 (Citizens' Alliance for General Elections) 이다.동연대는

해산할 때까지 함께 1055 개의 NGO가 참가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주된 목적이 정치 오직의 근절 및 전통적인 권위주의에의 도전, 그리고 시민주권의 확립이었다.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총선시민연대가 행한 것이, 낙천운동으로 불리는 후보자 결정의 과정개혁, 지역대립의 해소, 유권자 주권의 회복운동, 그리고 정치가로서 부적격인 인물을 낙선시키는 낙선운동 등이다.실제, 총선시민연대는 대상 후보자 86 명중 59 명을 국회의원의 자리로부터 내리는 것에 성공하였다.이러한 활동에 대해,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했다고 여겨지고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될 때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왔으며, 현재의 한국의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주된 단체로서 이하 4 개의 단체를 들 수있다.참여민주사회 연합 (통칭,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은, 1994 년 9 월, 200 여명의 회원에 의해,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라는 이념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이다.발족 당초, 의정감시 센터, 사법감시 센터, 공익소송 센터, 내부고발자지원 센터, 인권 센터등이 조직 되었다. 참여연대에서는, 「참여」 (시민의 참여를 재촉하기 위해, 독립한 운동을 목표로 한다), 「감시」 (부정 부패, 도덕성을 잃은 기업활동 등에 대하는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견제한다), 「대안」 (각종의 대안을 연구해, 주장한다), 「연대」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노력한다) 이라고하는 4 개의 기본정신을 내걸고 있다¹⁴.참여연대는 기존의 재야 운동을 계승해,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설되었으며, 타단체와 비교해서 주로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칭,경실련,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은 1989 년 7 월, 명동 YMCA 강당에서 500 여명이 참석해, 발기집회를 개최해 설립된 시민단체이다.경실련은 참여연대와는 달리 기존의 재야운동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특징을 비판해,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추공한 단체이며, 「시민의 뜻을 모아 힘과 지혜를 맞추어 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약자가 보호를 받아 정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라는 기본정신을 내걸고 있다. 동 단체는, 그 이름과 같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¹⁵.

환경운동연합 (통칭,환경련,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은 1993 년 4 월에 설립된 시민단체이며, 그 전신은 1982 년에 설립된 「한국 공해문제 연구소」이다.동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한 조직이며, 특히 공해문제의 해결에 진력해 왔다.그 결과, 1988 년에는 「공해 반대 시민운동 협의회」와 「공해 추방 운동 청년 협의회」를 통합해, 새롭게 「공해 추방 운동 연합」을 창설했다.현재의 환경운동연합의 주된 활동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성,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게다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CSR 문제에도 관심을 대고 있는 단체이다¹⁶.

환경 문제에의 대처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도 그 단체의 하나이다.녹색연합의 전신은, 1991 년에 설립된 「배달환경연구소」나 「녹색당준비위원회」 등이다.그러한 단체가 1994 년 4 월에 통합되어 「배달초록연합」이 창설되었다.그 후, 1996 년 4 월에 현재의 녹색연합이라는 이름이 되었다.주된 활동은 지구 환경 문제이며, 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¹⁷.

이상과 같이, 근년,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의 증가 및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통치가 결여하고 있던 재벌에 대해, 일정정도의 억제효과가 된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오히려 그 일족에 대한 모니터링 (monitoring) 의 역할을 완수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또 한국기업의 기업비리를 막는 존재로서 기대될 수 있다.

5. 한국의 기업윤리문제의 현황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기업윤리문제의 현황」이라고하는 제목하에, 정부, 재계, 대학, 기업의 각각에대해서 기업윤리에 관한 실시상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5-1 정부

먼저 정부는 IMF 체제이후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15일, OECD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하였지만, 이것에 수반해 한국에서도 동시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국제적인 상거래에 대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 후, 정부는 2001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정부의 부패방지책을 담당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한 것이며, 주된 내용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 보상금지제도, 시민감사청구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것에 수반해 2003년 2월부터 「공무원의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모든 정부 부서 및 공기업의 윤리강령의 제정이 확산되었다¹⁸.

게다가 2004년 6월부터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디지털 기업윤리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동센터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추천해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며, 주된 활동은 기업윤리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제공, 기업윤리교육의 지원, 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등을 실시하고 있다¹⁹.

또, 동위원회에서도 독자적인 기업윤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각 이해관계자(주주 및 투자자, 고객, 종업원, 공급업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단계별의 평가 모델, 또한 제조업, 금융, 건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업종별의 평가 모델을 작성하고 있어, 기업이 「윤리경영」의 자기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²⁰.

2005년 6월, 정부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의 협력 아래,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포럼」을 발족시켰다. 이 포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한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ISO2600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내의 SR 표준화를 확대시켜, SR에 대한 의견의 수렴이나 대응안의 작성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²¹.

또,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회 서비스를 확장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²²」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법제화한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선진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부국 레벨로의 대처도 실시하고 있다²³.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제도의 운용은 금융감독원이 담당)는 「준법감시인제도」를 제정하였다. 동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금융기관의 법령 준수, 자산의 건전한 운용, 고객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부 통제 기준이 설정되어 이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보호하는 「준법감시인」이 임명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 금융기관은 법령 준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²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에 「자율준수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를 제정하고 있다. 동프로그램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이 필요하지만, 동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의 감면이라고 하는 특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⁵.

금융분석원은 「자금선정 방지제도」를 실시해 자금선정이 발견되면, 즉시 금융기관의 직원이 금융분석원에 통보하도록 법규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2002년, 기업윤리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윤리경영」을 실시하는 한국의 우수 기업을 표창·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²⁶. 또, 같은 부서는 2006년 10월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트리플보텀라인(Triple Bottom Line²⁷)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한국형 “지속가능보고지표”(BSR(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의 공동으로 작성된 것이다. 동지표는 사회(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종업원,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환경정책 및 투자, 원재료 및 에너지, 환경에의 영향), 경제의 3개의 시점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²⁸.

5-2 재계

1996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윤리헌장」을 발표하고 있다²⁹.

「기업윤리헌장」의 주내용을 이하에 추출해 보기로 하자. 첫째, 「투명」,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 수 있다. 기업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내부의 투명도를 제고시키는 것, 그리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두번째, 기업간의 협력체계 강화이다. 한국정부는 요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전경제연합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셋째, 기업이 전문경영자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특징이며, 종래까지 한국에서는 전문경영자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벌중에는 적극적으로 전문경영자를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아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너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재벌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급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시의 자세이다. 일본형 통치의 전형예인 이해관계자주의에 찬동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극대화만이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무시한 경영이 행해져 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을 추천하는 이유도 잘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기업윤리헌장」이 개정되고, 「기업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동위원회의 주된 설치 목적으로는 신뢰있는 노사간의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을 통해, 노사간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것,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소자고령화 문제의 극복과 근로 환경의 개선등을 들고 있다.

또, 2000년에는 「기업윤리 실천메뉴얼」을 발간해, 그 후 몇차례의 개정판도 출판하고 있다. 2003년 후반부터는, 기업윤리학교가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윤리경영」의 국내외의 동향 이외에, 전문가의 초빙 강의나 참가하고 있는 기업인이나 오너가 자사의 대적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07년부터 「윤리경영」의 국내외의 동향과 개별 기업의 사례 소개를 하고 있는 「기업윤리뉴스레터」를, 국내외의 CSR의 동향 및 개별 기업의 사례 소개를 하고 있는 「CSR Briefs」를 각각 전달해,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에의 대적을 한층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다.

5-3 대학

필자는 2006년 11월부터 일주일에 걸쳐 한국교육인적자원부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전국의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학 45교, 사립대학 164교, 합계 209교를 선출하여, 경영학계의 학부 및 대학원의 홈페이지를 열람해, 기업윤리관련 과목의 개설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조사한 학교 중, 학부는 국공립대학이 13교/45교, 사립대학이 50교/164교로서, 전체 63교/209교이며, 대학원은 국공립 대학이 3교/45교, 사립대학이 18교/164교로서, 전체 21교/209교이었다.

한편, 비즈니스 스쿨 (Business School)의 경우, 국공립대학이 2교/45교, 사립대학이 9교/164교, 전체 11교/209교로서 저조한 편이었다.

따라서, 국공립·사립대학 전체의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학부에서는 약 30%, 대학원에서는 10%,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약 5%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학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약 40%, 사립대학이 약 47%로서, 사립대학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강과목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기업윤리」이며, 이어서 「기업과 사회」였다. 대학원에서는 그 개강수는 반감하지만, 개강 과목명은 학부와 같은 순서이었다.

과목 종별로서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이 41교로서 가장 많았으며, 필수 지정으로 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선택 과목으로서 위치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국공립·사립대학의 홈 페이지 조사의 합계

(단위 : 건)

	학부	대학원	Business School
기업윤리	26	5	1
기업과 사회	12	3	
경영과 사회	5	1	1
경영환경론 (환경 경영론)	5	1	2
기업환경론	4	4	3
윤리경영	2	1	1
기업가 정신과 기업윤리	2		
경영과 사회복지	2		
기업경영과 사회	1		
직업윤리	1		
기업법과 윤리	1		
경영윤리	1	1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1		
회계윤리		1	
경영자윤리			1
마케팅 윤리		1	
정보윤리		1	
기업윤리와 노동윤리		1	
기업과 환경		1	1
기업경영윤리			1
국공립대학 (전 45 대학)	13	3	2
사립대학 (전 164 대학)	50	18	9
합계 (전 209 대학)	63	21	11
1 학년	3		
2 학년	15		
3 학년	8		
4 학년	20		
전공선택	41		
전공필수 지정	0		
교양선택	1		
교양필수 지정	1		

주 : 조사기간 2006년 11월 2일~11월 7일

국공립 45 교, 사립 대학 164 교, 합계 209 교의 상·경영학계의 학부와 대학원 (경영학과)

(자료) 필자작성.

마지막으로, 과목 설치의 학년별로서는, 4학년생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2학년생이 뒤를 이었다. 4

학년생들은, 취직 활동을 끝내고 사회인이 되기 전에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또, 2 학년생들의 대부분은, 1 학년에 경영학의 기초를 배운 다음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하는 생각하는 면이 보여졌다.

5-4 기업

한국기업에 의한 「윤리경영」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계 대표 기관인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조사결과를 보기로 하자. 우선, 기업윤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500 대기업) 들은, 99년에는 21.8%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00년 이후, 그 수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의 45.2%로부터 2003년에는 59.9%에, 그리고 2005년에는 80.5%까지 증가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라고 하는 인식은 해마다 저하하는 한편, 「매우 필요」라고 느끼고 있는 기업이 증가 경향에 있다. 이것은 지금 「윤리경영」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리경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회적책임을 느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99년의 92.2%에서 2003년에는 62.7%로 크게 저하되었으며, 2007년의 조사 결과에서는, 무려 52.4%까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대조적으로, 기업의 생존성이나 수익성이라고 하는 이유로부터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기업은 「윤리경영」에의 대처를 기업의 존속에 관련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파악함과 동시에, 「윤리경영」의 실시가 새로운 수익을 낳는 것이라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윤리경영」의 담당 부서는 2005년부터 2007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른 부서와의 겸임이 줄어들고 있을 뿐이며, 전문 부서는 증가 경향에 있다.

이어서 기업윤리교육의 실시상황을 보면, 99년에는 25.5%로서 적은 수치였지만, 2001년에는 60.6%로 급증해, 2007년에는 거의 90%가까이의 기업이 기업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리를 인사사정에 반영시키는 기업도, 99년의 7.2%에서 2007년에는 69.4%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의 추이 (99년~03년) 단위 : %

항목	1999	2001	2002	2003
기업윤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상위 30 대기업	33.3	69.4	76.3	86.8
500 대기업	21.8	45.2	49.7	59.9
윤리경영이 필요한가				
매우 필요	-	54.5	59.9	68.0
어느 정도 필요	-	42.9	36.0	30.7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책임	92.2	68.7	69.1	62.7
기업의 생존성·수익성	6.8	28.4	28.5	36.0
기업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5.5	60.6	70.3	78.4
인사사정에 윤리를 반영시키고 있다	7.2	13.1	17.2	21.6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2003) 「2003년도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이종영 (2005), pp.24-25 을 참조해 필자작성.

표 9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의 추이 (05년~07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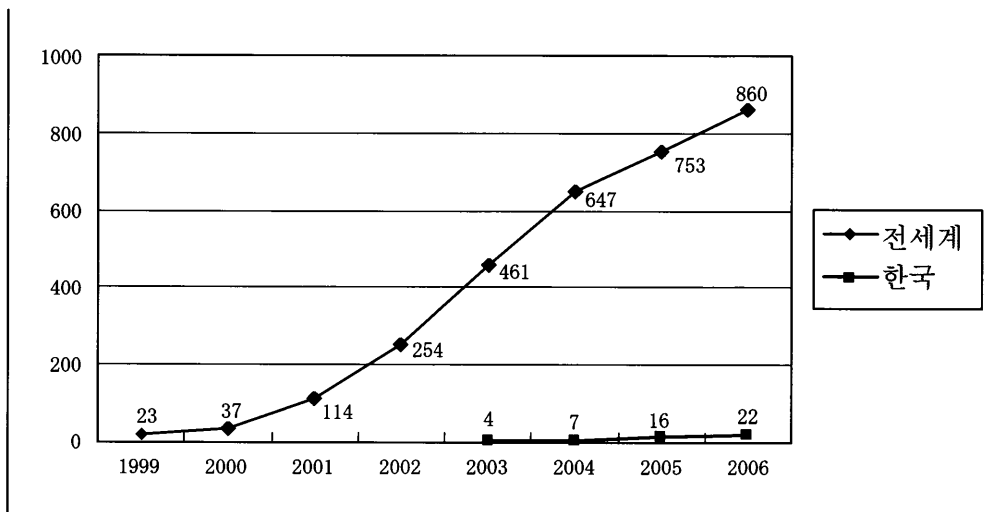
항목	년		
	2005	2006	2007
기업윤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500 대기업	80.5	84.5	93.5
윤리경영의 담당 부서			
전문부서	31	39.6	57.2
다른 부서서와의 겸임	48	53.1	40.3
윤리경영 추진의 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	-	52.4
내부 통제에 효과적인 수단	-	-	33.9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	-	-	9.7
기타	-	-	2.4
기업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0	86.6	89.5
인사사정에 윤리를 반영시키고 있다	-	24.2	69.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2005)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2007) 으로부터 필자 작성.

다음에, CSR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의 추이를 보기로 하자. 근래에는 종래의 환경보고서에 대신해서, CSR 보고서를 작성해, 홈 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많은 편이었다.

전세계의 발간추이를 보면, 99년에는 전체 23사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14사로서 3자리수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후 계속 상승을 보이기 시작해 2006년 시점에서는 860사가 CSR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의 경우, 2003년에 처음으로 삼성 SDI,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의 4사가 CSR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6년 시점에서, 22사까지 증가하고는 있지만, 세계의 조류로부터 하면 여전히 그 수는 적고, 아직도 발전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2 CSR 보고서의 발간 기업의 추이 (단위 : 건)



(자료) 한국산업자원부 (2006), p24

「윤리경영」의 일환으로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전개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향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전경련이 발간하고 있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3년도, 2005년도판)를 기초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현상을 확인해 보자.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의 규모의 추이를 보면,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의 총지출액은, 96년 시점에서는 3067억 6400만원의 규모였지만, 2002년에는 1조원을 돌파해, 2005년에는 1조 4025억 1000만원에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평균 지출액수는 96년에, 33억 3400만원이던 것이, 97년의 위환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해 98년에는 22억 6300만원까지 침체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36억 5800만원으로 다시 회복해(전년 대비 61.7%), 2005년 시점에서 57억 4700만원에까지 달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별의 규모의 추이와 세금 공제액의 추이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매출별의 규모로 보았을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출 1억 미만의 기업의 지출액이 50.8%에서 39.1%로 감소하였다. 한편, 매출 10억 이상의 기업의 지출액이 19.1%에서 33.2%로 증가하고 있다.

표 10 사회공헌활동의 규모의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1996년 (92사)	1998년 (147사)	2000년 (193사)	2002년 (202사)	2004년 (227사)	2005년 (244사)
총지출액	306,764	332,710	706,060	1,086,594	1,228,432	1,402,510
평균지출액	3,334	2,263	3,658	5,379	5,412	5,747
전년대비 증가율	—	△32.1%	61.7%	47.0%	13.06%	14.17%

주: 96년은 기업사회공헌백서 1998.2, 98년은 기업사회공헌 백서 2000.1, 2000년은 기업사회공헌백서 2002.1의 수치에 의한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2006) ,p37 및 pp.61-62을 참고로 필자작성.

6. 맺음말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먼저 위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개관하였다. 한국에서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연구자 또는 경제계의 회장마저도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 수많은 연구실적이 늘어나고 학술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97년에 위환위기가 발생한 후 한국경제는 혼란되기 시작했다.

그 주 원인으로서 이제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재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재벌의 기업윤리문제를 고찰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재벌문제에서 논의되는 것은 경제력집중이 주된 문제이었으며, 90년대에 들어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신문의 사설을 기초로 오랫동안 기업윤리문제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재벌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기업비리가 발생해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랬더니 90년 이후 재벌오너자신이 체포되는 사건이 가장 많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정권의 큰 권력, 재벌의 재무구조, 오너체제라고 하는 세가지가 재벌의 기업비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 하였다.

위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본문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증가와 시민단체의 대두를 지적하여 이러한 새로운 세력이 기업비리의 감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정부, 재계, 대학, 그리고 기업이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수준에서 보면 그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적이 활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업비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의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문제를 연구할 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측면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韓国・統計」를 참조. 액세스 2008.9.19
- 2 상위국은, 1 위 미국, 2 위 스위스, 3 위 덴마크, 4 위 스웨덴, 5 위 독일의 순서이다. 그 외, 아시아국가를 보면, 홍콩 12 위, 대만 14 위, 말레이시아 21 위, 태국 28 위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BRICs 를 보면, 브라질 72 위, 러시아 58 위, 인도 48 위, 중국 34 위라는 결과였다. World Economic Forum 홈 페이지 및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를 참조.
- 3 外務省ホームページ「日韓共同プレス発表」를 참조. 액세스 2008.9.19
- 4 황명수(1977), p.434
- 5 황보태(1981), pp.234-235
- 6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기술조사센터편(1981), p.120
- 7 예를 들면 이규억·이성순(1985) 및 이규억·이재형(1990)을 들 수 있다.
- 8 安倍誠 (2007), pp.232-233
- 9 각종 보도자료를 참조.
- 10 佐野 (2001), p52
- 11 근년, 한국에서는, 프라이빗·에퀴티(private equity)·펀드(PEF)로 불리는 투자 펀드의 존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자계 PEF 에는, Lone Star Funds, Carlyle, New bridge, Warburg Pincus, City venture capital, , JP Morgan equity partners 등이 있어, 자금 규모는 50 억내지 100 억 달러에 이른다고 여겨진다. 지동욱(2005), pp.39-40 를 참조.
- 12 金仁春著·崔民旻訳 (2007), p219
- 13 金赫來著·金本亜弓訳 (2007) p232
- 14 참여연대 홈 페이지를 참조.
- 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 페이지.
- 16 환경운동연합 홈 페이지.
- 17 녹색연합 홈 페이지.
- 18 이건희·최창명(2004), pp49-50
- 19 디지털 기업윤리 센터 홈 페이지.
- 20 국가청렴위원회(2007)를 참조.
- 21 이장원 이민돈 강영희(2006), p113 및 한국표준협회 홈 페이지를 참조.
- 22 한국국무총리실(2007)을 참조.
- 23 이건희·최창명(2004), pp50-51.
- 24 제도 및 내용의 상세는, 한국금융감독원(2006)을 참조.
- 25 제도의 배경 및 각국 비교에 대해서는, 심영섭(2005)을 참조.
- 26 한국산업자원부(2002)를 참조.
- 27 트리플보텀라인이란,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의 아래, 기업을 경제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해, 각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이며, 영국 Sustainability 사의 존·엘킨 톤(John Elkington)이 제창하였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보고서 가이드 라인에도, 트리플보텀라인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 28 한국산업자원부(2006), p 4.
- 29 「기업윤리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 페이지를 참조.

참고문헌

<일본어>

- 安倍誠 (2007) 「經濟危機後の財閥再編と事業再構築」 奥田聡編『經濟危機後の韓国—成熟期に向けての社会・經濟的課題—』アジア經濟研究所。
- 遠藤敏幸 (2007) 「韓国における外国投資の規制緩和—外国投資が韓国企業に与える影響—」 布留川正博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アジア—21世紀におけるアジアの胎動—』ミネルヴァ書房。
- 外務省ホームページ「日韓共同プレス発表」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visit/0804_2_pr.html)。
- 金仁春著・崔民炅訳 (2007) 「市民社会と民主化 (第Ⅲ部韓国における市民社会と民主化)」 西川潤・蕭新煌編『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民主化—日本、台湾、韓国にみる』明石書店。
- 金赫來著・金本亜弓訳 (2007) 「韓国政治改革における NGO 連合のジレンマと挑戦」 小林良彰・富田広士・粕谷祐子編『市民社会の比較政治学』慶応義塾大学出版会。
- 佐野孝治 (2001) 「韓国における外国人投資と「国富流出」論争—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韓国經濟 (下) —」 『商学論集』第 70 卷第 1 号福島大学經濟学会。
-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http://www.jetro.go.jp/world/asia/kr/stat_01/)。
- 朴一 (2002) 『韓国 NIES 化の苦惱—經濟開発と民主化のジレンマ—【増補二版】』同文館出版。
- 山根眞一 (2002) 「韓国財閥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經濟論叢』第 170 卷第 4 号京都大学。

<한국어>

- 강명현(1993) 「대기업의 기업윤리」 황명수 편『한국 기업경영의 역사적 성격』신양사.
- 강철규(1999)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 출판사.
- 김대환·김균 편(1999)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출판.
- 김기원(2002)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 공병호·최승노(1996) 『기업윤리 강령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경제연구원.
- 국가청렴위원회(2007) 『기업 윤리경영모델』.
- 매일경제산업부 외(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 박인순(199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윤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서광조·이응권(1996) 『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철학과 현실사.
- 심영섭(2005)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의 제도적 발전 방안』 산업연구원.
- 송원근 외(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나남출판.
- 이규역·이성순(1985)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 이규역·이재형(1990)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제(1996) 『한국 기업경영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이건희·최창명 (2004) 『윤리경영론』 학문사.
- 이종영(2005) 『기업윤리-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제 5 판)』 삼영사.
- 이장원, 이민돈, 강영희(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 장세진(2003)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재벌의 흥망』 박영사.
- 정주영(1981) 「한국기업윤리의 정립방향」 『국민윤리연구』 Vol.11No.1 한국국민윤리학회.
-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기술조사센터편(1981)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새로운 경영이념』.
- 전국경제인연합회 편(2003) 「2003년도 윤리 경영 실태 조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편(2005) 「CEO가 본 윤리경영의 추진 현황과 과제」 『FKI ISSUE PAPER』.
- 전국경제인연합회 편(2006) 『2005 기업·기업 재단 사회공헌 백서』.
- 전국경제인연합회 편(2007) 「윤리 경영 추진 실태와 과제」 『FKI ISSUE PAPER』.
- 조홍석(1991) 『한국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조은상(2003) 「기업내 부패의 유형, 원인 및 반부패 제언」 전경련간담회 PowerPoint 자료.
- 최정표(2004)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건국대학교출판부.

한국의 기업윤리문제

- 한국산업자원부(2002) 『기업윤리 경영실태조사의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 한국금융감독원(2006) 『은행의 준법 감시인 제도 운영의 모범 기준』.
- 한국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매년도판.
- 한국산업자원부(2006) 「한국형 “지속 가능 보고서 지표” 의 첫개발」 보도자료.
- 한국국무총리실(2007) 「사회적 기업 육성법」 『관보』 제 16413 호.
- 황명수(1977)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 발달 방향」 『논문집』 Vol.11 단국대학교.
- 황보태(1981) 「한국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경원논총』 Vol.1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황인학 외(2000)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keji/>).
-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kicac.go.kr/open_content/index.htm).
- 디지털기업윤리센터 (<http://ethics.kicac.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한국국무총리실 (<http://pm.go.kr/index.jsp>).
- 한국지식경제부 (<http://www.mocie.go.kr/index2.html>)
-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영어>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http://www.weforum.org/pdf/Global_Competitiveness_Reports/Reports/gcr_2007/gcr2007_rankings.pdf) .
- World Economic Forum (<http://www.weforum.org/>)